

금융도시 발판 다진다

금융중심지 지정 협력·금융타운 조성 추진 지원 등 전북도, 국민연금공단·금융기관·시군 등과 협약

전북도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시군 등 9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성공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한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성일 원주군수, 김장근 NH농협금융지주 전북본부장, 허정진 우리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협력활동,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협력,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관련 전북유치 활동,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 ▲기타 상호협력 필요 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등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 형성, 금융센터 내 금융기관 등의 입주 및 투자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전라북도는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후 도내 산업을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2월중 각 기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기관 간 협력사항을 밀도 있게 논의한 후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산불진화 임차헬기

담수능력 시연 현장검증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28일 임실군 관촌면에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담수 및 인양능력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번 검증은 이병철 도의원(전주 5)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담수·인양 능력이 부족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측에 임차헬기의 담수 및 인양능력을 실제로 검증하라고 요구하여 마련됐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언론사, 산림청 헬기전문가, 소방부서, 헬기임대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차헬기 기종과 2018년 개정된 조달청 임차헬기 등록기준을 적용한 재원표 및 중량을 확인하고, 임차 계약에 명시된 중량의 물을 실고 이륙할 수 있는지 실제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에서 최찬욱 위원장은 "도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계약이 추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병철 도의원은 "이번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사업부서에서도 임차계획 수립 시 담수용량 기준 등에 국토교통부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1800리터를 가볍히 2018년 전북도 산림 임차헬기 담수능력 시연이 28일 전북 임실군 관촌면 회봉오천 인근 헬기 계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산림 임차헬기가 1800리터가 넘는 무게를 가볍히 옮기고 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자영업자 달래기’… 문 대통령, 민생 챙기기 주력

공정위원장·중기벤처부장관 등에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 국정 운영 돌파 의지

비핵화 외교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까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근 일주일 사이에 민생 관련 주무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직접 지시'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담정이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 하다. 실질적인 무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기관 간 협력사항을 밀도 있게 논의한 후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지시들은 일선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한 상한 자영업 민생을 직접 주문을 통해서 달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출국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순방으로 생길 국정 공백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는 일종의 당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일 해소를 위한 업계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홍 장관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 매출 선순환 구도 형성, 안전망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번 직접 지시는 지난 22일 최중구 금융위원장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이후 나흘이 지난 26일 당정은 즉각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직접 지시에 나선 데에는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국정 성과'다. 경제와 민생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외교를 제외하고 딱히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일자,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 층에서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층 민생 사토잡기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전북도-군산시-스코트라 투자 협약 체결

군산시와 전북도, 수상태양광전문기업 스코트라(주)(대표이사 이종목)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8일 시청 면담실에서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이종목 스코트라(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코트라(주)는 군산임피산단단지 3만9,500㎡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해 30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며 군산시와 전북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스코트라(주)는 새만금산단이나 국가산단인 아닌 임피산단단지의 3만 9,500㎡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012년 조성되어 최근까지 분양이 다소 부진했던 임피산단단지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년간 지정돼, 군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과 관련해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를 일 반지역보다 20% 정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와 전북도는 스코트라(주)의 상생의 파트너로서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상태양광 선도 기업인 스코트라(주)의 투자는 군산시가 태양광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축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 투자를 결정할 스코트라(주)는 지난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해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1면에 이어... 유치원 휴 · 폐원 증가, 대안은 없나?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법안을 마련해오지 않아 결국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소위는 내달 3일 유치원 3법과 한국당자체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정지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주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마련 중인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

원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라며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휴 ·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